



## 국가 인공지능(AI) 전략위,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수립 추진 현황 국무회의 보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이하 ‘위원회’)는 2월 10일(화) 국무회의에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이하 ‘인공지능 행동계획’)」 수립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행동계획은 총 99개 실행 과제와 326개 정책 권고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날 보고는 인공지능 행동계획의 수립 경과와 주요 과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인공지능 행동계획은 ‘실행’에 초점을 둔 국가 전략인 만큼, 정책 실효성과 현장 수용성을 위해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위원회는 제1차 전체 회의(대통령 주재, '25.9.8.)에서 의결한 인공지능 행동계획 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3개월간 100여 차례의 분과·전담반(TF) 회의, 끝장토론, 인공지능책임관(CAIO) 협의회 논의 등을 거쳐 '25.11월에 초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후 기자간담회('25.12.15), 20일간의 대국민 의견 수렴('25.12.16~'26.1.4), 330개 유관 기관·단체 대상 설명회('25.12.30) 등 폭넓게 의견을 청취하였고, 저작권·교육·인공지능(AI) 기본사회 등의 주요 이슈는 현장간담회를 통해 관련 단체 등과 직접 소통하며 협의하였다.

\*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인공지능 기반 대전환 ▲국제 인공지능 기본사회 기여라는 3대 정책축과 이를 뒷받침하는 12대 전략 분야로 구성

이날 보고된 인공지능 행동계획의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 기업과 창작자 간 상생, ▲예방 중심 보안 체계로 전환 ▲국가 인공지능·데이터 정책 연계·협업이 주요 과제로 보고되었다. 구체적으로, ‘창작자 권리보호’와 ‘저작물 인공지능 활용 촉진’이 양립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26년 2분기까지 마련하고, 착한 해커(화이트해커)가 취약점을 합법적으로 발굴·신고해 사전에 제거하는 제도를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26년 2분기까지 인공지능·데이터 정책 간 종합적·효율적인 연계·협업을 위한 관리 체계(거버넌스) 정립 방향을 마련한다.

다음으로, 범국가 인공지능 기반 대전환의 주요 과제로 ▲대국민 서비스와 정부 업무 처리 방식 혁신, ▲복지 신청주의 탈피, ▲국방 인공지능 전환(AI) 가속화가 보고되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이 민원 안내부터 처리까지 완결하는 인공지능 통합 민원 이음터(통합민원 플랫폼)를 구축하고, 정부 내 인공지능의 안전한 도입·활용을 지원하는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 기반에 독자 인공지능 기초 모델(AI파운데이션 모델) 및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신경망 처리 장치 <NPU>)를 연계하여 '26년 4분기까지 구축한다. 또한,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인공지능 발전 주기(3~6개월)를 고려해 국방 인공지능 도입을 전통적인 무기 획득(10년 이상) 대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국방 인공지능 획득 체계를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국제 인공지능 기본사회 기여를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인공지능 기본사회 추진이 주요 과제로 보고되었다. 인공지능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숙의를 거쳐 '26년 4분기까지 인공지능 기본사회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향후 위원회는 99개의 실행 과제를 담은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최종 수립하여 제2차 전체 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행동계획이 확정·발표된 후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 부처별 소관 과제의 이행을 독려하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임문영 부위원장은 “이번 국무회의 보고는, 인공지능 행동계획이 각 부처가 하나의 방향성 아래 추진 해나갈 국가적 전략임을 분명히 하고, 향후 이행 과정에서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위원회는 국가 인공지능 정책 지휘 본부(컨트롤타워)로서 인공지능 행동계획의 최종 수립 및 효과적 이행을 위한 지원과 조율에 힘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붙임 1.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주요 과제
- 2.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수립 추진 현황

담당 부서	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 총괄전략팀	책임자	팀장	김보경 (02-2224-4121)
		담당자	사무관	이상민 (02-2224-4122)
		담당자	사무관	조은형 (02-2224-4123)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 삶을 채우는 디지털·AI

대한민국  
지능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원회 출범 후

# 100일간 100여 차례 회의 진행, 대국민 공개 의견수렴 거쳐 총 99개 실행과제 도출

3대 정책축

주요 과제

## 1 AI혁신 생태계 조성



SI기업과 창작자 간  
상생·발전 생태계 조성

☑ 거래시장 ▲있는 저작물은 거래 활성화 지원, ▲없는 저작물은 학습 거부권 행사 지원, 거부표시 없는 경우 해선 사용·후보상 적용

화이트해커 활용한  
예방 중심 보안체계 전환

☑ 화이트해커가 기업·기관의 보안 취약점을 합법적으로 상시 발굴·신고해 사전에 제거하는 제도 도입

국가 AI·데이터 정책  
연계·협업 방향 정립

☑ AI·데이터 정책 간 종합적·효율적인 연계·협업을 위해 현재 분절적인 관련 거버넌스 정립 방향 마련

## 2 범국가 SI기반 대전환



SI로 대국민 서비스와  
정부 업무방식 혁신

☑ 국민이 일상언어로 문의하면 SI가 민원 안내부터 처리까지 완결하는 플랫폼 구축, 정부 내 SI의 안전한 도입·활용 지원

SI 기반 예방적 복지로  
복지 신청주의 탈피

☑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AI·데이터를 활용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추진

민간 SI를 발빠르게 도입  
국방 AX 가속화

☑ 국방 SI 도입을 전통적인 무기 획득(10년 이상) 대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국방SI 획득 체계 마련

## 3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



국민과 함께하는  
SI기본사회 추진

☑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AI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고르게 누릴 수 있는 'SI기본사회 추진계획' 마련

## I 추진 배경

- 경제 성장 궤도 재진입과 도약이 결정되는 중대한 기로에서 AI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혁신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견인할 핵심 수단
- ☞ 국가AI전략위를 중심으로 민·관 역량을 총결집한 대응전략 마련 추진
  - ※ (美) AI리더십 강화를 위한 조치사항 설정 및 연방정부에 지시('25.7월, 'AI 실행계획')
  - (中) 글로벌 기술 표준 및 다자협력 주도 방침 천명('25.7월, 'AI 글로벌 거버넌스 행동계획')

## II 추진 경과

- '25.9.8.(국가AI전략위 출범식)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추진방향 수립
  - 'AI 3대 강국 도약 비전 달성을 위한 ①AI혁신 생태계 조성 ②범국가 AI기반 대전환 ③글로벌 AI기본사회 기여'라는 3대 정책축·12대 전략분야\*를 제시
    - \* 1)AI고속도로 구축 2)차세대 AI기술 선점 3)AI핵심인재 확보 4)AI모델 확보 5)AI규제혁신 6)산업AX 7)공공AX 8)지역AX 9)AI기반 문화강국 10)AI기반 국방강국 11)AI기본사회 12)글로벌 AI이니셔티브
- 위원회 출범 후 3개월간 100여차례 회의(8개 분과, 6개 TF 등), 1박 2일 끝장토론, 국가CAIO협의회\* 논의 등을 거쳐 초안을 마련('25.11월)
  - \* (국가CAIO협의회) AI미래기획수석 주재, 부처별 CAIO(차관급) 참여
- 위원회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12.15.), 주요 기관·단체(330개) 설명회(12.30.), 공개 의견 접수 등 폭넓은 소통을 통해 총 99개 실행과제와 326개 정책권고를 담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최종안 마련
  - 각 부처에 정책권고 및 추진기한\*, 입법과제(법률 20건\*\*, 시행령 4건)를 제시
    - \* (주관부처) 과기(121), 교육(32), 산업(32), 행안(25), 국방(23), 복지(17), 중기(12), 국토(11), AI전략위(10), 국정원(10) 등 (추진기한) '26.1분기 82개(24.5%), '26.2~4분기 184개(56.4%), '27년 이후 60개(18.4%)
    - \*\* (소관상임위) 과방위(6), 복지위(5), 문체위(2), 행안위(2), 국방위(2), 정무위(1), 산자위(1), 법사위(1)

### Ⅲ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주요 과제

전체 과제 : [참고3]

#### 정책축 1. AI혁신 생태계 조성

##### ① [과제32] AI 기업과 창작자 간 상생·발전 생태계 조성 문체부·과기정통부 등

- “창작자 권리 보호”와 “저작물 AI 활용 촉진”이 양립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포함한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26.2Q)
  - (음악·도서·방송 등) 거래시장이 있는 저작물은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고, (온라인 공개게시물 등) 거래시장이 없는 저작물은 AI학습 거부권 행사를 지원하며, 거부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선사용·후보상 원칙 적용

■ (현장소통) 10개 저작권 단체 간담회('26.1.15.), 방송협회 협의('26.1.20.), 문체부 협의(국가CAIO협의회 2회 등)

##### ② [과제9] AI시대 화이트해커를 활용한 예방 중심 보안체제로 전환 과기정통부·국정원 등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AI 기반 사이버 위협 등에 대응해 선제적·상시적으로 보안 취약점을 발굴·제거\*하는 제도를 도입 (~'26.4Q, 시범사업)
  - \* (취약점 신고·조치·공개제도(CVD/VDP)) 화이트해커가 기업·기관의 보안 취약점을 합법적으로 상시 발굴·신고해 사전에 제거하는 제도(美·EU는 2020년대부터 채택·운영 중)
  - 민간·공공 시범사업 후 법제화\* 등 단계적 도입·확산 추진
  - \* 화이트해커가 선의의 목적으로 취약점 탐색하는 행위도 현행 「정보통신망법」 위반

■ (현장소통) 시민단체 논의('25.12.30.), '해커원(240만명 가입 화이트해커 플랫폼)' 등 전문가 논의('25.12.24.), 관계부처 협의(총 5회)

##### ③ [과제8] 국가 AI·데이터 정책 연계·협업 방향 정립 국가AI전략위

- 민간·공공의 AI-데이터 정책 간 종합적·효율적인 연계·협업을 위해 현재 분절적인 관련 거버넌스\* 정립 방향 마련 (~'26.2Q)
  - \* (유관 위원회 현황) △ 국가AI전략위(AI기본법, 대통령 위원장), △ 국가데이터정책위(데이터산업법, 총리 위원장), △ 공공데이터전략위(공공데이터법, 총리·민간 공동위원장)
  - ※ (현 상황) 국가AI최고책임자 : AI미래기획수석 / 국가데이터최고책임자 : 국가데이터처장

■ (현장소통) 행안부, 과기정통부, 국가데이터처 등 관계부처 협의('25.11월~'26.2월)

## 정책축 2. 범국가 시 기반 대전환

### 4 [과제50-58] AI로 대국민 서비스와 정부 업무방식 혁신 행안부·과기정통부 등

- 국민이 일상언어로 문의하면 AI가 민원 안내부터 처리까지 완결하는 “AI 통합민원플랫폼” 구축 추진(‘26년 ISP 수립 (~’26.3Q))
- 정부 내 AI의 안전한 도입·활용을 지원하는 “범정부 AI 공통기반”에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과 국산 AI반도체(NPU)를 연계하여 구축 (~’26.4Q)

■ (현장소통) 행안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협의(‘25.11월~’26.1월)

### 5 [과제89] AI 기반 예방적 복지로 복지 신청주의를 탈피 복지부·국세청·개인정보위 등

- AI·데이터를 활용해 신청하지 않아도 국민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 탈신청주의 원칙”을 규정하는 등 **관련법\* 개정** (~’26.3Q, 개정안 국회 제출)

\*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아동수당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에너지법」

■ (현장소통) 시민단체(참여연대·민변 등) 간담회(‘25.12.30.), 복지 신청주의 탈피를 위한 **법률 개정 세미나**(‘26.1.6.), 복지부·국세청·개인정보위·금융위 등 관계부처 협의(‘25.12월~’26.1월)

### 6 [과제75] 민간 AI를 발빠르게 도입해 국방 AX 가속화 국방부

- AI 발전 주기(3~6개월)을 고려, 국방 AI 도입을 전통적인 무기 획득(10년 이상) 대비 **획기적으로 단축하도록 국방AI 획득체계 마련** (~’26.2Q)

■ (현장소통) 관계부처 협의(3회), 국방부 장관 주재 회의(‘25.11.18.), 각군 참모차장 간담회(‘25.12.12.) 등

## 정책축 3. 글로벌 시기본사회 기여

### 7 [과제81] 국민과 함께하는 AI기본사회 추진 과기정통부·행안부 등

- AI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AI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숙의를 거쳐 ‘AI 기본사회 추진계획’을 마련 (~’26.4Q)

■ (현장소통) AI기본사회 간담회(참여연대·민변 등, ‘26.1.5.)

## IV **향후계획(안)** : 국가AI전략위(제2차 전체회의) 의결·확정 및 이행 점검

## □ 개요

-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안)에 대해 국민, 언론에게 공개·설명하고  
각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반영해 최종안 마련

## □ 현장 소통 및 의견수렴 실적

## ① 초안 대국민 공개 및 의견 반영

- (공개 의견 접수)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안) 전체본(200여쪽)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이례적으로 공개하여 의견수렴(총 559건 접수)  
※ 12.16.~1.4. 20일간 총 559건 의견 접수(개인 415건, 단체 144건)
- (각계 기관·단체 설명) 330여개 산업계·재계, 학계 및 연구계, 시민사회  
주요 기관·단체 대상 온라인 설명회(웨비나) 개최(12.30.)
- (기자간담회) 위원회 출범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12.15.)를 개최하여,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안) 주요 내용을 설명
- (지방정부) 중앙지방정책협의회(17개 시·도) 논의(12.24.)

## ② 저작권, 교육, AI 기본사회 등 주요 이슈 관련 현장 설명 및 협의

- (현장간담회) AI 기본사회를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1.5), AI 교육  
관련 단체 간담회\*\*(1.7), 저작권 주요 협단체 간담회\*\*\* (1.15.) 개최  
\* 참여연대, 민변,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등 8개 단체 참여  
\*\* 정보교육학회, 정보과학교육연합회, 정보교사연합회, 디지털교육협회, 서울교육청 등 참여  
\*\*\*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참여
- (관계부처 협의) 국가CAIO협의회\*(’25.11월, ’26.1월) 등을 통해 쟁점 조정  
\* AI미래기획수석 주재, 부처별 CAIO(차관급) 참여

□ 개요

- 행동계획(안) 초안 공개(12.16.) 후 접수된 의견 559건을 검토하고, 주요 이슈(저작권, 노동 등)에 대응해 현장간담회를 통한 설명·협의 노력

<주요 이슈보도> - (12.29. 중앙일보) "저작물 사용 허락 안받아도, 일단 쓰라는 AI전략위", (1.6. 경향신문) 속도전 치우친 'AI 교육 정책', (1.20. 한겨레) AI 3대강국이라는 속도전, 그곳엔 사람이 없다  
 <현장간담회> - (1.15. 저작권 간담회) 신문협회, 방송협회, 음악저작권협회 등, (1.5. AI기본사회) 참여연대, 민변 등, (1.7. AI교육 간담회) 정보교사연합회, 디지털교육협회 등, (1.20. AI-미디어) 방송협회(SBS, KBS, MBC, EBS)

□ 주요 보완사항

- ① (저작물 AI 학습<sup>32</sup>) 거래시장이 있는 저작물은 선사용-후보상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거래 활성화 지원을 추진한다는 점을 명확화
  - ※ 거래시장 有(음악, 도서, 방송 등) : 거래 활성화 지원(선사용-후보상 미적용)
  - 거래시장 無(온라인 공개 게시물 등) : 학습 거부권 행사 지원 + 거래시장 형성 지원
- ② (보안 패러다임 전환<sup>9</sup>) 사후 대응 한계를 넘어 민간 화이트해커를 활용한 선제적·상시 보안점검체계 도입 방안을 구체화
  - ※ 美, EU가 운영 중인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 도입 로드맵을 마련('26.1Q), '26년 시범사업 후 '27년 법·제도 개선 추진(사회분과 및 관계부처 협의 완료)
- ③ (권리보호 강화<sup>81,88,89,91</sup>) 복지 신청주의 탈피를 위한 구체적 법 개정 과제\*를 추가, AI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여성 등 약자 권리보호를 강화
  - \*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아동수당법」, 「에너지법」 등 개정안 국회 제출(~'26.3Q)
  - 'AI 기본사회 추진계획'은 사회적 속의를 거치도록 일정·절차를 보완 (기존최종안 마련('26.2Q) → 수정초안 마련('26.2Q), 사회적 논의 후 최종안 마련('26.4Q))
- ④ (기업 책임 강화<sup>35,40,91</sup>) AI 시대 공정경쟁 생태계를 조성\*하고, AI 활용 범죄 대응에 있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역할을 명확화\*\*
  - \* AI 활용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공정위), 금융AX가 빅테크 특례로 변질되지 않도록 보완(금융위)
  - \*\*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AI 활용 불법정보 생성·유통 피해 방지, 플랫폼 사업자 책임과 역할을 명확화하는 법·제도 마련(방미통위, 성평등부)

**참고3**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99개 실행과제**

정책축	전략분야	과제명	
[정책축 1] AI혁신 생태계 조성	AI 고속도로 구축	01 GPU, NPU 등 핵심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02 지속가능한 AI 데이터센터 생태계 구축	
		03 AI 서비스 기반 고도화를 통한 접근성 제고	
		04 국가데이터 통합플랫폼 기반 민간·공공 데이터 소재 연계 및 품질 고도화	
		05 AI 데이터 공유 생태계 활성화	
		06 보건의료 AI 고도화와 AX 전환에 필요한 학습데이터 확충	
		07 국가 과학 AI 통합 인프라 및 연구개발 혁신 생태계 구축	
		08 국가 AI·데이터 거버넌스 정립	
		09 민간·공공 AI 보안 생태계 활성화 및 정보보호산업 자생력 확보	
		10 AI 기반의 사이버 보안 체계 구축, AI 보안 기술 경쟁력 강화 및 보안 전문 인재 양성	
		11 AI 시대, 넥스트 AI 안보 위협 대응 및 협력 강화	
	차세대 AI기술 선점	12 피지컬AI, 휴머노이드, AI 반도체 분야 차세대 기술 확보·적용	
		13 (가칭)국가 초지능 연구소 설립	
		14 기초과학 및 전략 과학기술 분야 AI 혁신, AI 연구동료 개발	
	AI핵심인재 확보	15 AI시대 국가교육 체계 혁신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16 초중등 국가 교육과정 및 교과서 체제 재구조화	
		17 초중고 전학년에서 연속적인 디지털·AI 교육 필수 이수	
		18 초중등 AI 실습 교육 플랫폼 구축	
		19 평가 제도 및 입시 제도 혁신	
		20 AI시대 교사 양성 및 연수체계 혁신	
		21 정보 교사 임용 확대 및 교원 전문성 강화	
		22 AI영재교육 체계 재설계	
		23 대학 및 대학원 AI 인재 양성	
		24 산업 AX 역량 제고를 위한 인재 양성	
		25 최고 수준 AI 전문가 유지 및 유치	
		26 AI 인재 경력 단절 해소	
		AI모델 확보	27 범용 AI파운데이션 모델 확보
			28 산업별 수요 기반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 및 실증 확산
	29 핵심 과학 분야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 및 공공·산업 확산		
	30 보건의료 특화 AI파운데이션 모델 확보		
	AI 규제 혁신	31 개인정보·미개방 산업 데이터 활용 규제 과감한 정비	
		32 AI 학습·평가 목적의 저작물 활용 및 유통 생태계 활성화	
		33 규제 합리화를 통해 혁신을 촉진하는 AI 산업생태계 조성	
		34 국가 AI 대전환을 뒷받침하는 AI 법제 환경 조성	
		35 AI 스타트업·중소기업 공정 성장·경쟁 생태계 조성	
	[정책축 2] 범국가	산업AX	36 산업별 AI 에이전트 개발 및 기업 수요 발굴
			37 '30년 K-제조업 글로벌 1위 달성을 위한 「제조 AI 2030 (가칭)」 전략 수립

<b>AI기반 대전환</b>		38 자율주행 차량 중심 교통·물류 AI 대전환	
		39 '30년 AI 기반 글로벌 바이오·헬스 5대 강국 도약	
		40 AI 기반 금융산업 혁신성장과 금융산업 AI 대전환	
		41 자율운항 선박 개발과 AI를 활용한 수산업·해운업의 혁신성장	
		42 AI시대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43 농산업의 AI 대전환	
		44 AI 가치평가 체계 확립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45 AI 빅테크 기업 육성을 위한 150조원 + α 국민 성장 펀드 조성	
		46 AI 융합 분야 대표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AX 스프린트	
		47 AI 바우처를 통한 LLM과 에이전트 수요 및 초기 시장 창출	
		48 한국형 AI 풀스택 수출 전략 마련 및 글로벌 확산 추진	
		49 질적 성장 중심의 AI 데카콘 기업 육성	
		<b>공공AX</b>	50 AI-Native한 공무원 협업체계 구축
			51 칸막이를 넘어 데이터와 맥락을 연결하는 AI 업무관리 플랫폼 구축
	52 공공 정보화 사업,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		
	53 세계 1위 AI정부 도약 견인, 공공분야 AI챔피언 양성		
	54 공공부문 AI 도입에 대한 국민 기본권 보장, 공공 AI 영향평가		
	55 안전한 AI이용 보장, 공공부문 AI 윤리기준 마련		
	56 공공 AI 대전환 가속화, 적극행정 인센티브와 감사 면책 마련		
	57 공공AX 정책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성과 평가 시행		
	58 AI를 활용한 최고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		
	59 행정/사법 투명성 증대를 위한 공공데이터 공개		
	60 교사 지원형 AI 보조교사 도입 및 AI 기반의 교육행정 혁신		
	61 국내 AI실증·고도화의 마중물, 공공시장의 AI 테스트베드화		
	62 K-Gov AX 모델의 글로벌 확산, K-AI 얼라이언스 구성		
	63 공공AX 거버넌스 및 실행체계 구축		
	64 공공부문에서의 AI·디지털 포용성 확대		
	<b>지역AX</b>	65 5극 3특 K-AI 특화 시범도시를 조성하여 대표 AI 융합 도시로 육성	
		66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에 기반한 AX 혁신 벨트 조성	
		67 지역 산단을 지역 AX 활성화를 위한 산업 인프라 거점으로 탈바꿈	
		68 지역 인재를 활용한 지역 AX 기업 육성 및 지역 창업 역량 강화	
		69 수요 맞춤형 지역 AX 인재 양성 및 정주형 인재 순환 생태계 조성	
	<b>AI 기반 문화 강국</b>	70 AI 기반 콘텐츠 창작 지원체계 구축 및 창작자 생태계 활성화	
71 K-컬처 산업의 AX 활성화 지원을 통한 콘텐츠 사업자 육성			
72 AI 선도 적용으로 K-문화콘텐츠 산업의 지속적 성장 가능성 확보			
73 K-콘텐츠와 K-AI의 동반 해외 진출을 통한 글로벌 시장 확대			

	AI 기반 국방 강국	74 국방 AI 거버넌스 혁신으로 국방 AI 추진체계 재설계
		75 국방 AI 기술 및 체계 획득 제도 개편
		76 국방 데이터 및 클라우드 기반 민군 협력 촉진·활성화
		77 군 간부의 AI 전문성 제고를 위한 AI 학위과정 확대
		78 민군 협력을 통한 국방 AI 보안 역량 강화
		79 국방 AX 가속화를 통한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
		80 방산 AI 육성을 통한 방산수출 4대 강국 진입
		81 「모두를 위한 AI 기본 사회 추진계획」 수립
[정책축 3] 글로벌 AI기본사회 기여	AI기본사회	82 AI 기본 사회 추진 거버넌스 마련
		83 모두의 AI를 위한 AI 윤리 확산·고도화
		84 AI 공론장 설계 및 운영
		85 AI를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의 AI 실험실' 구축
		86 AI 기본 사회 글로벌 얼라이언스 구성
		87 AI 시대 생애 경제 통합 전략 마련
		88 AI 전환 대응 일자리 혁신 및 현장 역량 강화
		89 AI 시대 복지·돌봄의 접근성 확대
		90 AI 기본 의료의 구현
		91 AI 범죄 근절 및 대응 역량 강화
		92 국민 금융 안전 제고 및 AI 기반 포용적 금융안전망 구축
		93 전 국민 AI 역량 대전환 프로젝트
		94 지역·계층 간 AI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95 민관 협력형 AI 교육정책 연구체계 구축
		96 교육 AI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성을 위한 실증·평가·확산체계 구축
		글로벌 AI이니셔티브 구현
98 전략적 글로벌 AI 협력체계 구축		
99 선도형 글로벌 AI 안전 거버넌스 구축		